



시민참여와 환경보건

시민환경연구소 / 최 예 용

꼭 읽는 순서

- ① 환경과 건강 ② 지구온난화와 건강영향 ③ 내분비계 교란물질과 건강영향
- ④ 생활속의 중금속 노출과 건강 영향 ⑤ 유전자조작식품과 건강영향 ⑥ 환경성 발암물질과 건강영향
- ⑦ 민감취약집단의 환경과 건강 (여성, 모자환경보건) ⑧ 민감취약집단의 환경과 건강
- ⑨ 대기오염과 건강영향 ⑩ 수질오염과 건강영향 ⑪ 환경문제에 대한 대중과의 홍보와 소통
- ⑫ 정부의 환경보건정책 ⑬ 시민참여와 환경보건

2008년도, 1년 동안 환경보건분야의 주요 이슈는 뭐니뭐니해도 식품안전문제인 광우병과 촛불시위가 가장 먼저고, 다음으로 석면공해, 태안기름유출사고의 건강영향문제, 쓰레기시멘트공장과 주민건강문제 등이다. 여름 아스팔트를 덮었던 촛불문제는 가을 국정감사에서 100% 정치문제로 분류되어 논의되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번 국감을 시멘트국감, 석면국감이라면서 이 두 문제에 집중했다.

행정적 분류는 다르지만 시민운동에서는 식품안전문제가 환경문제의 하나로 분류된다. 특히 건강과 보건문제로 직결되기 때문

에 환경보건분야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어떤 성격의 정부이든 국민건강과 안전에 관련한 분야의 정책은 모두들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기 마련이다.

이전부터 심각한 환경보건분야의 문제인 식품안전문제에 관해서 이명박 정부 초기, 부처통합 과정에서 '농림수산식품부'라는 곳이 생겨 눈여겨보았는데 말 그대로 무늬만 식품부고 이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 수입식품사고 등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식품안전을 총괄하는 부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실제 그러한 부서에 대한 밑그림이 나오기도 했지만 늘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 1년 차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광우병사건과 촛불시위, 식품안전문제가 온 국민의 관심사로 나아가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대규모 거리시위로 발전한 사건이다. 수없이 터져 나온 중국산 수입식품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미국' 소고기 수입의 문제요, 지구촌 최대의 식품안전문제의 하나인 '광우병' 문제가 한국에서 초대형 정치문제, 외교문제로 터졌다.

한 학자는 '개인건강을 넘어 사회건강으로'라는 제하의 신문칼럼에서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2008년 촛불' 사건은 식품안전을 넘어 사회적 건강함을 되찾으려는 시도였다고 평가했다. '아무리 자유무역도 좋고 돈벌이가 좋아도 미친소를 먹고 뇌에 구멍이 뚫려서야 되겠나 하는 위기의식, 바로 이것이 그간 잠잠하던 풀뿌리 민중을 광장으로 나서게 했다'고 말한다.

이 자리를 빌려 학계에서 식품안전문제를 환경문제, 구체적으로 환경보건의 주요 문제로 다루는데 소홀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시민들이 가장 민감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식품문제가 식품안전의 측면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고 대개의 경우, 식품 영양의 차원에서 다루어진다는 지적이다. 그러다보니 식품오염문제는 환경학과 보건학분야에서는 아예 커리큘럼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관련분야의 전문가도 거의 식품영양학 전공자들뿐이다. 학문분야가 속

도는 더디지만 현실세계의 요구를 반영해간다고 하지만 이 분야에서 만큼은 매우 완고하고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할 뿐이다. 식품안전분야의 연구를 지원하고 후원하는 체계가 없기 때문일까?

행정체계에서 식품안전분야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식품의약품안전청(KFDA)에서 전담하고 있는데 보건분야 시민운동이 환경운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활발하기 때문인지 이 분야를 감시하는 시민운동단체나 활동가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진다. 환경운동계에서 식품안전분야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긴 하지만 실제 이 분야를 전담하는 단체나 오랫동안 다루어온 관록의 활동가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학계나 시민운동계가 식품안전문제에 모두 소홀한 셈이다. 이때문인지 식품안전분야의 행정에 대한 감시의 눈길은 사건이 발생할 때만 반짝이고 일상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같은 문제와 비슷한 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하곤 한다. 한마디로 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민참여'라는 개념이 절실한 분야가 바로 식품안전분야라고 할 수 있다.

2009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충남 석면광산 인근마을 주민들에게서 집단적인 석면질환 발병이 확인되었다는 사건이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고 이어서 충북지역의 석면광산 지역에서 석면공해가 심각하다는 뉴스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일제시대에 개발되어 1980년대까지 운영되었던 석면광산이 있는 충남 홍성과 보령 일대의 마을 주민을 무작위로 215명 조사한 결과, 110여명에게서 석면폐와 흉막반, 폐섬유화와 같은 석면병이 관찰되었다. 충북 제천지역에는 석면광산 인근에서 채석장이 가동되는데 이 곳에서 석면광택을 건드려 주변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민환경연구소가 과거 석면광산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5명의 주민들에 대한 CT촬영을 대학병원에 의뢰했는데 이중 2명에게서 석면폐와 흉막반이 검진되었다. 이들 질병은 이전에는 석면방직공장의 노동자들에게서나 나타나던 직업병으로 머리카락보다 훨씬 작은 크기의 길게 생긴 석면입자가 호흡기를 통해 폐에 박혀 폐를 둘러싸고 있는 막을 딱딱하게 하거나 두껍게 만들어 폐기능을 저하시키는 병이다. 석면폐와 흉막반은 폐암이나 악성중피종암을 동반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료 방법이 없다는 이 병에 충남의 지역주민들이 그것도 조사대상의 50%가 넘는 높은 비율로 발병되고 있다니 충격적인 일이다.

그 동안 이 지역에서 돌아가신 적지 않은 주민들도 석면병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작년 여름 필자가 홍성의 한 석면광산을 찾았을 때, 70대 후반의 마을 전이장님은

“아버지도, 삼촌도, 다른 여럿 친척들도 폐병으로 돌아가셨고 현재 살아 있는 사람들도 폐가 안 좋은 사람이 많다.”고 말하며 무슨 대책이 없겠느냐고 하소연하셨다. 치사율이 높은 폐암이나 악성중피종에 걸린 주민들은 대부분 돌아가시고 남은 주민들은 폐질환을 안고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조사대상의 절반은 과거 석면광산에서 일한 이력이 있어 직업성노출에 의한 직업병으로 볼 수 있고, 나머지 절반은 광산에서 일한 이력이 없는 순수 주민들로 환경성노출, 즉 공해병에 해당한다.

환경피해 해결의 원칙 중 하나는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런데 석면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석면광산은 모두 문 닫은 지 오래되어 가해자가 사라져 버렸다. 20-30년의 오랜 잠복기로 인해 가해자를 찾기 어려운 석면피해의 특징 때문에 일본이나 유럽 국가들은 석면특별법을 만들어 피해자를 구제하고 있다. 퇴직한 노동자에게 발생한 직업성 질환과 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구제되지 못하는 시효제도 때문에, 그리고 공해병으로서의 석면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석면노출이 확인되기만 하면 치료와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석면이란 물질이 산업화과정에서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광물로 인식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사회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피해발생이 예상됨에도 미리 대처하지 않고 녹장을 부리다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죽어가야 마지못해 나서는 관료행정이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재개발 지역에서 살다 석면에 노출되어 악성중피종 암에 걸린 환자의 호소에 환경부장관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지금껏 아무런 조사나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그 환자는 국감 이후 환경부에 찾아가 대책을 호소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예산타령만 하고 있다며 자신이 어서 죽어 조용해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더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악성중피종 환자의 여생이 평균 1년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환경부의 행태는 두고두고 비난 받아 마땅하다.

공해병 환자를 찾아내기 어렵다며 수십억의 환경보건 연구비를 지출하던 환경부가 정작 환자가 나타나자 탄 소리를 하며 외면하고 있다. 환경부는 전국 유수의 대학병원에 환경성질환연구센터와 석면중피종센터를 지정해 놓고 있고, 산하 환경과학원에 환경보건센터와 석면분석센터를 각각 두고 있어 석면피해조사에 바로 착수할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이 시스템을 전혀 가동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석면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점은 환경부가 주관하여 노동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부 및 국방부 등이 참가하는 정부합동 석면정책협의회 운영에서 그대로 나

타난다.

여러 가지 이유로 회의가 미루어지더니 정작 회의가 열리면 참석자 명단에 있는 담당 과장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 사무관들이 그것도 돌아가면서 형식적으로 참석한다. 회의를 주재해야 할 환경부 국장은 늘 늦게 나타나 매번 같은 의례적인 인사말만 늘어놓고 석면정책에 대한 이해도 없으며 문제 해결 의지도 전혀 보이지 않다가 대통령 보고나 국회일 때문에 바쁘다면서 곧 사라지기 일췌다. 필자가 부처간 협력을 높이기 위해 과천청사 내에 있는 부처간 돌아가면서 회의를 개최하자고 했더니 모두들 외면한다. 그런데도 환경부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에는 석면문제 대책 마련 등이 버젓이 올라있다고 신문들이 전한다.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시민환경연구소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일제시대부터 80년대까지 남한지역 36개, 북한지역에 10개 석면광산이 가동되었다. 충남에 17개로 가장 많았고, 충북 9개, 강원 6개, 경기 3개 그리고 경북에 1개의 석면광산이 운영되었다. 이들 지역에 대한 주민과 전직 광산노동자들에 대한 건강역학조사와 사망자들의 석면관련성이 조사되어야 한다. 또 지금도 석면광물이 지역을 오염시키고 있지 않는지 조사하여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보다 석면사용 기간이 길고 사용량이 많아 석면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2006년부터 2년 6개월 동안 석면특별법을 통해 3천여 명의 피해자와 유족들을 구제했다. ‘구보타’라는 오사카지역의 건설비제조 공장에서는 오랫동안 석면을 사용해왔는데 노동자들뿐 아니라 인근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석면암으로 사망, 일본열도를 ‘구보타쇼크’로 몰아넣은 사건이 터졌다. 사건발생 후 9개월여 만에 석면신법이 가동되었고 환경성 석면피해자들과 시효가 넘은 산재사망자들의 유족들을 포함, 6천여 명이 나 신고했다고 한다.

여기서 일본석면신법이 부담하는 질병은 악성중피종과 폐암, 2가지로 석면폐와 흉막반 등과 같은 질병은 보상대상에서 빠져있는 것이 일본신법의 한계라고 지적된다. 비록 한계는 있지만 일본 정부가 구보타 사건이 터진지 1년이 채 안돼서 바로 석면특별법을 제정하고 피해자 구제에 나선 것은 석면추방운동이 활발했기 때문이다.

구보타 사건 자체도 시민운동가들에 의해서 발굴되었다. 일본의 시민운동은 전국적 단위로 강하게 조직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역단위로 상당히 짜임새 있게 조직된 풀뿌리운동이 확산되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석면문제의 경우도 산업보건운동가들을 중심으로 20년이 넘는 관록을 갖고 있다. 이들 운동가들이 발굴해낸 피해자들이

다시 피해자운동을 조직한 것 역시 5년을 넘는다. 구보타 사건은 오사카지역의 산업보건운동가와 석면피해유족활동가 2명이 발굴해 냈다고 알려진다.

이들은 석면피해자 상담을 받다가 노출이유가 분명치 않은 3건의 중피종 피해 사례를 접하게 되었고 원인을 찾아나가다가 이들 3명의 거주지가 구보타 주변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구보타가 오래전부터 석면을 다량으로 사용해왔고 산재피해자가 이미 다수 발생해왔다는 점을 조사해내면서 공장 담을 넘어 인근 주거지역으로 석면공해가 확산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구보타 사건이 터지자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있던 일본의 석면추방운동계는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특별법제정 국민서명운동을 강도 높게 전개했다. ‘일본석면대책전국연합회(Ban Asbestos Network Japan)’이란 이름의 단체에는 일본의 내로라하는 노동조합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불과 6개월 만에 188만 명의 서명을 받아내는 개가를 올렸다. 석면피해자가 속출하고 여론이 들끓자 일본정부와 정치권이 할 수 없이 신속하게 석면피해법을 만들게 된 것이다.

우리의 경우 작년 하반기 노동부와 환경부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석면특별법 제정이 논의되다가 흐지부지 되었

다. 산업발전을 위해 사용된 죽음의 광물, 석면에 의한 피해는 ‘공해병 문제’요 ‘산업 재해’다.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하는 정부 관료들에게 더 이상 석면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상황이 이러하니 전국의 석면피해자들이 1월 20일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전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를 만들고 전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피해자들과 시민의 힘으로 석면피해조사와 피해보상 그리고 석면피해 예방활동을 제도화하는 <석면특별법>제정운동에 나선 것이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올해 들어 석면광산문제가 연이어 터져 나오면서 여야 3당이 앞 다투어 석면특별법안을 만들었고 지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병합 검토중이다.

환경보건정책 10개년 종합계획이라는 것이 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만들어진 것인데 이명박 정부에서 수정 없이 진행되고 있다. ‘환경오염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국민을 최소화한다.’는 슬로건 하에 10년 내에 세계 10위권 환경보건정책 선진화를 외치며 환경오염위험인구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수용체 중심(건강중심) 환경관리, 환경보건 정의실현, 사전예방 적용강화, 시민참여 및 알권리 보장 등의 네 가지 세부 방침을 갖고 있다. 계획공포 후 4년이 지나는데 지금, 이들 목표는 얼마나 실천되고 있을까? 당국은 이런 이야기를 할 것으로 예상

된다. ‘환경과학원에 환경보건센터를 세우고, 전국의 의과대학 및 주요 현장에 7-8개의 환경성질환연구센터를 설치했다. 문제가 된 공단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는 10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폐광지역의 주민건강조사도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어린이 건강을 위해 제품의 유해성을 조사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수은오염 등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다 등등’ 조사연구 하나하나를 들어보면 그럴듯하고 필요해 보인다.

그런데 정작 환경보건정책 10개년 종합계획의 핵심인 환경오염 위험인구는 얼마나 줄고 있나? 하는 질문에 당국자들은 어떻게 답할까? ‘환경오염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답인데 ‘이런 조사를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며 나름 노력하고 있다고 말할 것이 뻔하다. 한숨이 나온다.

지금까지 두서없이 시민운동가의 관점에서 환경보건문제를 살펴보았다. ‘시민’의 자격은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는다. 전문가로서의 시민, 평범한 주부이자 소비자로서의 시민, 시민단체의 회원으로서의 시민 등 다양하다.

‘참여’의 방식 역시 다양한데, 시민단체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에서부터 환경보건문제를 다루는 기사나 주장에 대해 댓글을 다는 행위, 더 나아가 문제해결에 대한

이러한 활동과 여론에 대해 지지하고 성원하는 마음으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참여'의 활동이 될 수 있다. 앞서 석면특별법 제정을 위한 캠페인에 서명을 하는 활동 역시 매우 중요한 '참여'다.

환경보건문제에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공부해가면서 활동해온 지 다섯 해가 넘는다.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은 환경운동계가 시민참여의 방식을 다양하게 조직해내는데 미숙하다는 점이다. 또한 환경보건문제에 대해 지구력을 갖고 매달리는 활동가 근성이 아쉽다. 공단지역의 주민들이 오랫동안 공해피해를 호소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하여

정부가 학계에 피해 조사를 의뢰하여 진행되자 정작 지역의 환경운동가와 시민활동가들이 조사활동을 감시하는데 매우 소홀하다. 행정당국과 조사를 맡은 학계에서도 이들의 감시활동을 귀찮고 부담스러워하여 배제하기 일쑤다.

그러다보니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즉 위해소통이 어느 사회문제 보다도 환경보건 분야에서 중요하고 절실하다. 시민참여가 시민운동계의 화두이듯 연구자와 행정당국 및 정치권에서 올바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공동의 화두로 다루어져 환경보건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